

격월간
정세와 동향

제8호

[2013_06_10]

모심의 살림의 노길

이슈 진단

생태학적 도전과 협동조합의 역할

'기후변화'와 '원전 사고'의 충격적 의미를 되새기며

분야별 동향

농업·먹거리 | 경제·생활 | 사회·환경 | 정치·사회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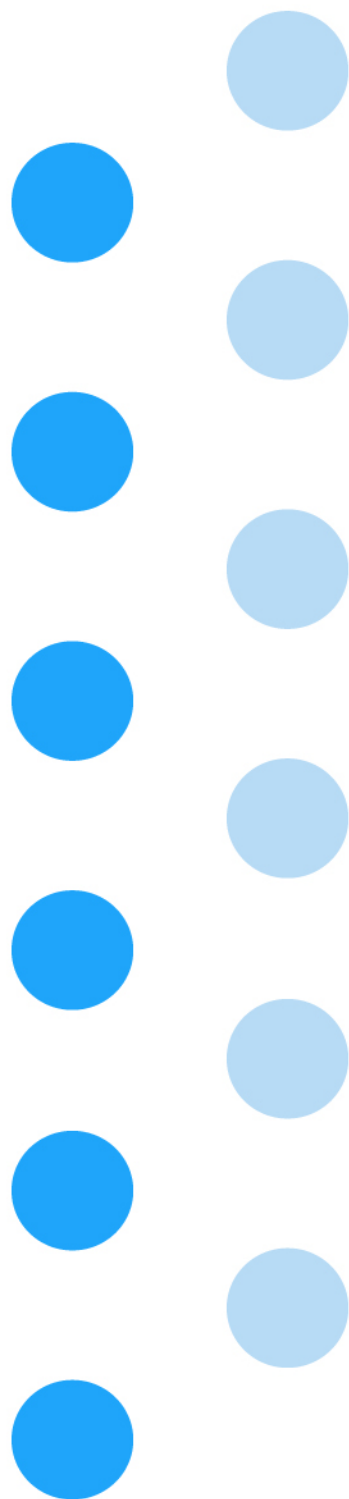
살림의 말

한살림 협동운동의 '비밀'

'생-소 하나' 원칙과 새로운 사회·경제



모심과 살림 연구소



- 목 차 -

이슈 진단

- 생태학적 도전과 협동조합의 역할 1

분야별 동향

[농업 · 먹거리]

- 옥수수과 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불안정해지고 있다 9
- 유럽을 중심으로 ‘종자에 대한 특허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10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GMO 밀이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11
- GMO 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12
- ‘지속가능한’ 음식 문화로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자 13

[경제 · 생활]

- 사회문제가 된 비만, 세금을 매길 것인가 바르게 먹을 것인가 16
- 갈수록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서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17
-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다 19
-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본 사회적기업의 현재와 전망 20
- 협동조합 설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2

[사회 · 환경]

- 생태계 위기의 신호, ‘꿀벌’을 살려내자 24
- 돌고래의 엇갈린 운명, 제돌이의 귀향과 계속되는 돌고래쇼 25
-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계속되는 원전 사고 27
- 남극을 위기로부터 구하는 방법 28

[정치 · 사회운동]

- 국민연금 불법무기투자, 국민연금은 협동조합에 투자하라! 31
- ‘을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 32
- 감정노동, 감정도 강요가 되면 노동이 된다 33
- 청년 극우화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35

살림의 딸

- 한살림 협동운동의 ‘비밀’ : ‘생-소-하나’ 원칙과 새로운 사회 · 경제 37

이슈 진단

생태학적 도전과 협동조합의 역할**- '기후변화'와 '원전 사고'의 충격적 의미를 되새기며 -**

■ 장면 1: 불편함을 넘어 위험한 진실로 다가 온 기후변화 문제

-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어섬

- 지난 5월 9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 지구시스템연구소가 운영하는 마우나 로아 관측소(Mauna Loa)에서 1958년 처음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400ppm을 넘었다고 발표.
- 하와이에 위치한 마우나 로아 관측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CO₂ 관측소로, 인간 활동 등에 따른 인위적 CO₂ 배출이 거의 없는 곳이어서, 이곳 측정 기록은 세계적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대기 중 CO₂ 농도와 400ppm 초과가 말하는 위험한 진실

- CO₂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지구온난화 물질로 대기 중 농도가 400ppm을 넘어선 것은 매우 충격적 일이라 할 수 있음. 해외 한 매체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이정표(sobering milestone)',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 행동을 요청하는 사건'이라고 전함(www.commondreams.org/headline/2013/05/10-5).
- 이번 CO₂ 농도 400ppm은 지구 역사상 수백만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준 것으로, 마우나 로아가 관측을 시작한 후 1959년에 CO₂ 농도가 316ppm이었는데, 매년 1ppm씩 증가하다 최근에는 연간 2ppm 이상 늘어나, 결국 이번에 55년 만에 총 84ppm이 증가해 400ppm을 넘게 됨.
- 대기 중 CO₂ 농도는 낮과 밤, 계절과 장소에 따라 수시로 변하지만 전체 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음. CO₂ 농도는 산업혁명 전까지 약 80만 년 동안 180~280ppm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이 시작된 1870년에 280ppm 이던 것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143년 만에 결국 400ppm을 넘어섬.
- 과학자들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2038년에 CO₂ 농도가 기후 재앙을 다스릴 수 있는 최종 저지선인 450ppm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즉 450ppm을 넘으면 지구의 위험 한계인 2도씨 이상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럴 경우 지구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문제는 350에서 400ppm까지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400에서 450ppm까지의 시간이 더 짧다는 것으로, 과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약 25년 정도라 할 수 있음.

- 기후변화가 미칠 파국적 영향과 후퇴하는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

- 지구온난화 물질인 CO₂가 한 번 대기 중에 배출되면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 지구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 특히 근래에는 대기 중 CO₂가 바다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 산성화'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대기 중 CO₂가 바닷물에 녹아 탄산염과 반응해 중탄산염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물속 탄산염 농도는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탄산칼슘이 만들어지지 못해 조개껍질이나 산호 골격, 동물성 플랑크톤 등 해양생물의 성장은 저해되고 해양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남.
- 그런데 기후변화가 미칠 파국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을 추진해 왔음.
- 하지만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 CO₂ 농도 최대치 350ppm을 훨씬 넘어 이번에 400ppm을 초과했다는 것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줌.
-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도시 산업문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지구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핵심 방법으로 모색되어 온 교토의정서가 각 국가들의 책임 회피로 유명무실화되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미국을 제외한 선진 37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8%까지 감축하기로 약속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이 만료되는 작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열렸으나 참가국들 간 입장 차이로 결국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8년 더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를 봄.
-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이 불참기로 해서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임. 미국은 처음부터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교토의정서를 이끌어냈던 일본도 약속을 버린 채 나갔고,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도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음. 그 결과 2라운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약속한 국가들의 배출 총량은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관심이 경제성장에 쏠리게 된 데다, 자신들 임기 내에 정치·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결정을 피하려는 각국 정치지도자들의 무책임성 등이 작용한 잘못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가 특히 큰 우리나라의 선택은?

- .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벌써 처음으로 CO₂의 연 평균 농도가 400ppm을 넘어 한반도의 온난화 속도가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태안반도에 1990년에 세워진 관측소에서는 우리나라 대기 중 CO₂ 농도가 1991년에 360.1ppm이었던 것이 21년 만인 작년에 40ppm이 늘어나 400ppm을 넘어선 측정치를 발표한 바 있음.
- . 우리나라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특히 높은 이유는 국토면적 대비 화석연료 소비량이 워낙 많은 데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CO₂ 증가 속도는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 문제는 대표적 화석연료인 석유의 생산·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석유 정점(oil peak) 시대가 5~10년 내에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원전을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과연 원전이 기후변화 시대의 대안으로 적절한지 깊은 성찰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임.

■ 장면 2: 돈벌이 대상이 된 원전과 반복되는 사고의 위험성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원전의 핵심 부품이 안전 관리의 책임을 진 사람들에게 의해 조작된 충격적 현실

- . 원전 관련자들의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고, 급기야 원전 부품 납품업체가 위조품을 공급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준 일들이 작년에 연이어 발생했음. 작년 12월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체 원전에 대한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위조부품 1만 3천여 개가 납품되었고 14기의 원전에 가짜부품이 설치되었음을 밝히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 . 그런데 반년도 지나지 않아 원전의 핵심 부품이 불량품으로 사용된 사실이 또 다시 밝혀짐. 지난 5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이거나 준비 중인 원전 6기에 위조된 불량품이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함.
- . 수차례 근본 대책 마련을 약속해 왔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해 일어난다는 것은 원전에 대한 정부와 관련기관, 관련업계 및 학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원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에 충분함.

- 이번 부품 위조사건은 정부의 원전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줌

- . 첫째, 알려진 대로 작년의 위조부품 납품 사건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였던 반면, 이번에는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험검증기관이 위조의 주범으로 포함되어 있음.
- . 둘째, 이번 일이 사건화 된 계기가 자체 검증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년 경우처럼 외부의 제보 때문이라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자체 검증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함.
- . 셋째, 이번에 문제가 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관련 매체의 보도가 있고 나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긴급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점, 심지어 작년 말 감사원 등 정부기관이 원전 관련 문제점들을 확인하고서도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밝혀진 점 등은 원전에 대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폐쇄적 비밀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게 관행화 되어왔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줌.
- . 넷째, 이번에 국내 시험기관의 위조 행위가 밝혀진 데는 의뢰를 받은 해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 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만약 문제가 된 국내 기관이 자체 시험을 진행하고 이번 경우처럼 결과를 조작했다면 사실여부의 확인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에서, 자체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줌.
- . 다섯째, 이번에 불량부품 공급으로 문제가 된 6기의 원전들 대부분이 최근에 가동을 시작했거나 가동을 앞두고 있음.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약 한 달 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작년 7월에 가동을 시작했거나 올해 말과 내년에 가동할 계획이니, 후쿠시마 이후 원전 종사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함.

- 우리는 후쿠시마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 . 후쿠시마 사태는 원전 사고와 방사능 오염이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와 자연생태계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지, 핵에너지에 의존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태로운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 주었음.
- .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로 안심시켜왔지만, 연이어 터지는 원전 관련 부정과 비리, 가동을 멈춰야 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 국민들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음.
-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이후 세계의 원전 산업이 주춤해진 상황을 활용해 원전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했고, UAE와의 원전 수출 계약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다섯 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고 홍보함.
- . 나아가 정부는 좁은 국토에 원전 밀집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13기의 원전을 신규로 더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음. 70대의 촌로(村老)들

이 8년째 힘겹게 싸우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도 정부의 원전 수출과 확대 정책이 자리하고 있음.

- 원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위험천만한 현실

- .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원전에 내재된 '위험'보다 그것을 이용하려는 '욕망'이 더 크기 때문.
- .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도 자연재난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절대 안전' 논리로 노후된 원전을 무리하게 가동했던 원자력 업계와 관료의 '비밀주의', '관료주의', '상업주의'가 자리하고 있음.
- . 작년과 올해 연이어 발생한 원전 비리와 불량부품 납품 사건 역시 원전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익을 앞세워 원전의 해외 수출에 발 벗고 나선 정부의 논리도 이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
- . 문제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원전 개발 및 확대 정책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임. 특히 중국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15기에다 백두산 일대를 포함해 앞으로 80기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 결국 박근혜 정부가 국정기조로 내세운 '국민안전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원전을 둘러싼 위험의 문제는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음.

- 원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실천에 있음

- . 이번 원전 위조부품 사고로 국내 23기의 원전 중 10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번 사태의 원인을 '개인 비리'로 돌리고 '부품 교체'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원전을 둘러싼 사고의 재발은 막기 어려울 것임.
- . 전력 에너지의 3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번 일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하지만 문제 당사자들의 자기 혁신 노력이 없이 국민들의 자발적 절전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전 정책과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총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
- . 특히, 그동안 원전 관련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와 원전 관련 업계에서 '전력 대란', '블랙아웃', '경제 침체', '전기료 폭탄' 같은 말로 지속적으로 겁박해 왔던 바, 이번 사태로 겪게 될 전기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원전 확대 추진의 또 다른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음.

- . 이번에 불량으로 납품된 '제어 케이블'은 원전 내부의 사고 신호를 안전을 담당하는 제어 시스템으로 전달해주는 신경망과 같은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됨. 그렇다면 원전 전반을 둘러싼 이상 신호들을 민감하게 읽어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회적 신경망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지금 당면한 원전 문제는 부품 교체로 결코 해결할 수 없음. 수백 억 원의 예산과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품을 교체해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단 한 번이라도 심각한 사고가 나면 수많은 생명의 희생은 물론이고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려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도 정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원전 사고의 특징임.
- . 결국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교체한다는 기계적이고 환원론적인 사고를 버리고, 지금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와 그것에 기반한 사회경제 체제,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전반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원전의 위험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해 온 사람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한살림 역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를 위해 '나부터 실천하는' 노력들을 탈핵 실천 활동과 연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음.

■ 생태학적 감수성과 책임성을 가진 협동조합의 역할을 기대하며

- 생태학적 딜레마와 근대적 성장 모델의 한계

- .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방안과 그에 따른 에너지 부족의 해결책으로 강조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이 주는 '생태학적 딜레마'는 근대적 성장 모델 전반에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음.
- .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를 기정사실화 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을 찾을 경우,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는 물론 풍력과 태양광 등 자연 에너지 어느 것도 명쾌한 답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 자연자원 매장량과 생태학적 수용능력의 '한계' 요인과 세계경제의 '위기' 문제는 에너지, 자원, 자본의 무한 공급을 전제로 한 근대적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 따라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현대 산업사회 구조 전반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기후변화와 원전 사고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세대, 자연계 생명체들의 생존과 공존을 위한 대안적인 발전모델이 필요함.

- 대안적 사회경제 모델로서 협동조합과 이에 대한 생태학적 물음

-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순과 한계가 지구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이 대안적 모델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
- . 초기 협동조합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사업체를 통해 주류 시장경제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과제나 이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작되었음. 그러나 시장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협동조합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음.
- .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려 했던 국가의 노력 또한 부작용과 함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여기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그 충격과 변화들이 고스란히 지역과 생활인들의 삶으로 전달됨에 따라 협동조합을 포함해 대안적인 사회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들이 크게 높아졌음.
-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신자유주의적 성장체제가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데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고갈 등 생태적 위기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임.
- . 지금까지의 성장 모델 자체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동조합 역시 자본주의 태동기와 성장기의 이론과 실천양식을 참고는 하되 '새로운' 성찰과 모색이 필요함. 협동조합이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 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실히 실현하고,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해 생존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대안의 영역들을 창조해내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들이 필요함.
- .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과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시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보완적 역할에 주로 머물러 있음.
- . 하지만 지금처럼 지속불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은 '주어진 욕구의 실현'을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의 욕구 전환'이 필요한 상황을 맞고 있음. 갈수록 거세지는 생태학적 도전 앞에서 '협동조합은 곧 선(善)'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만큼, 협동조합은 생산의 성격과 내용은 물론 생산조건 자체에 대해서도 깊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음. 특히 식량, 에너지, 물 등 생존과 경제활동의 기본 요소인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지혜로운 이용은 협동조합은 물론 지금 시대의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이자 책무라 할 수 있음.
- . 따라서 자본주의 위기 시대에 협동조합은 '더 많은 생산'에서 '더 좋은 생산'으로 생산의 성격과 내용을 바꿔낼 필요가 있음. 또한 협동의 방식도 자신의 부족함(결

핍)을 채워가는 차원을 넘어 시대적 공동의 과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 체계 속에서 이윤추구 기업과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생존주의(survivalism) 전략만으로 협동조합의 정당성을 설명해내는 데 한계가 있음. 생산과 소비, 생활양식 전반의 전환을 목표로 필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결집시켜내는 데 있어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역할들이 강조되고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생명운동으로서 한살림 협동조합 모델이 가지는 의미와 과제

- . 지구적 생태위기와 세계적 경제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생태적 감수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음.
- .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물품의 생산 방식과 유통 및 소비 과정이 이웃과 자연, 미래 세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합원들은 조합의 사회·생태적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파괴적인 죽음의 질서를 생명살림의 질서로 바꿔내기 위한 활동들을 얼마나 책임 있게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지 깊은 물음이 필요함.
- . 한살림은 일찍이 현대 산업문명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질서를 간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의 힘으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길을 추구해 왔음. 여기에는 근대적 성장체제 속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소비자 협동조합이 가졌던 지향과 원리를 넘어서고자 하는 문제의식들이 자리하고 있음.
- . 오늘날 한살림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과 후쿠시마 사태 직후부터 '탈핵 실천 활동'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문명전환에 대한 운동적 비전과 목표의식에 따른 것임.
- . 특히 탈핵과 관련해서 한살림은 원전과 방사능의 위험성을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자체 기준치를 마련해 취급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일을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음. 또한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어 대안에너지를 생산하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5일에는 수도권지역(서울, 고양파주, 성남용인) 한살림 조합원 가족과 활동가, 실무자 150여 명이 '한살림 탈핵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을 찾아 한살림부산 활동가들과 함께 노후 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음.
- . 앞으로도 한살림은 기후변화와 원전 문제가 주는 생태학적 딜레마와 도전 상황을 맞아 자기 변화에 기반한 사회변화, 제도변화, 체제변화의 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분야별 동향 1

농업·먹거리

● 옥수수과 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불안정해지고 있다

- 기후변화로 올해 국제곡물가도 폭등할 가능성이 높음

- . 올해 이상한파로 옥수수, 콩의 파종이 늦어지고, 파종률 또한 저조한 데다, 이미 가뭄이 시작되어, 전반적으로 농산물 작황 사정이 좋지 않음. 따라서 여름부터 국제곡물 가격이 출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 5월 둘째 주 기준으로 옥수수 파종률은 28%로 1980년대 이래 최저치인 데다, 콩 파종률 또한 6%에 불과해 지난 몇 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함. 옥수수 파종률은 5월 셋째 주 사이에 평년 수준을 회복했으나 이상기후로 수확량은 여전히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기후변화 외에 정치, 경제적 요인들 또한 곡물가격을 급등시키고 있음

- . 미국이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확대하면서 전 세계 옥수수 생산가격은 200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지만, 만성적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기후변화로 곡물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식량 수출국들이 자국 공급량 확보를 위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투기자본의 선물거래가 급등하면서 가격거품이 커졌기 때문임.
- . 곡물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옥수수, 콩 등 국제곡물가 인상이 식품가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농가에도 영향을 주어, 사료자급을 포함해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옥수수와 콩은 대부분 GMO로 수입되고 있어 먹거리 안전성도 위협하고 있음

- .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GM 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0~2012년 식용으로 수입한 GMO 농산물은 전체 식품 수입량 565만7천t의 86%에 달하며, 식용유, 전분당, 장류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와 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 우리나라는 옥수수 자급률이 0.8%이고, 콩 자급률이 6.4%에 불과함. 특히 옥수수는 사료용 75%, 가공용 23%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먹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유럽을 중심으로 '종자에 대한 특허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 식물에 대한 특허가 GMO는 물론 종래의 작물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종 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유럽에서 1990년대 이래 식물에 대한 특허가 확대되어 왔으나, 각국에서 종 다양성의 위협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온 결과, 2012년 5월 유럽의회가 종래의 농작물(GMO 제외)에 대해 특허 승인을 허용하지 않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유럽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승인을 거의 하지 않았음
- 하지만 유럽특허청에서 최근 들어 몇 주일 내에 12건의 특허를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이것은 식물에 대한 특허 인정을 재래종 전반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오랫동안 특허가 허가되지 않았던 먹거리 생산 영역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최근 들어 종래의 식물과 동물에 대한 특허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유럽 특허청에 현재 수천 건이 계류되어 있음. 유럽특허청에는 토마토, 파프리카, 꽃양배추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데, 50% 이상을 이미 몬산토와 신젠타가 점유하고 있는 실정임.

- 유럽을 중심으로 종자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운동들이 나타나고 있음

- 전 세계 수백 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조직인 "종자에 대한 특허 반대(No Patents on Seeds)"는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구성원 및 각계각층에 공개서한을 보내 특허 승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음.
- 이들이 특허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식물, 동물 혹은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가 이루어지면 해당 자원을 돌보는 사람들(특히 농부)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하게 됨
 - 둘째, 특허가 확대되면 종자 분야에서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시장의 집중이 이루어져 균형을 파괴하고 중소규모 시장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게 됨
 - 셋째, 농민들에게는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면서, 생물다양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게 됨
- 종자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럽특허법에 유래된 유전물질, 식물, 동물, 먹거리에 대한 특허를 배제하는 것을 분명한 규정으로 넣을 것을 주문하고 있음. 나아가 농민들의 종자보존 전략의 필요성과 종자를 교환하는 비공식적 시장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통합적인 법체계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GMO 밀이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재배가 금지된 GMO 밀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 . 최근 미국 농무부(USDA)는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조작 밀(품목명 MON 71800)이 오리건 주의 한 밀밭에서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종자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함.
- . 이번에 발견된 유전자조작 밀은 미국의 거대 농기업 몬산토가 1998~2005년 시험 재배하여 승인을 추진하다 비판 여론에 밀려 상업화를 포기한 품종으로,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종자로 알려짐.

- 미국의 GMO 밀 사태는 우리나라 식탁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음

- . 우리나라는 국내에 소비되는 밀의 약 53%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특히 오리건 주로부터 수입하는 밀의 물량이 미국산 수입 밀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큼.
- . 2010년 이후 오리건 주에서 수입된 미국산 밀은 171만 톤에 이르며, 같은 기간 미국산 밀가루도 3,352톤이 수입되어, 이번에 문제가 된 GMO 밀 역시 이미 국내에 들어와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됨.
- . 밀 수입국인 일본은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산 밀 수입을 중단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중단 조치 대신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GMO 전문가들은 2008년의 광우병 수입 쇠고기 파동과 같이 이번에도 정부가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음.
- . 1996년 GMO가 우리나라에 처음 수입된 이래 17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승인건수 기준으로 수입국 가운데 2위의 국가가 되어, 먹거리 및 식품 첨가물, 가축 사료, 의약품, 건강식품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 한살림을 비롯한 'GMO반대생명운동연대' 참여 단체들은 지구의 건강과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와 식량주권 실현 등을 위해 'GMO 수입에 대한 정부의 심사규제 강화와 미국산 밀 수입 중단', 'GMO 표시제 확대와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기업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자급률 향상' 등을 요구해 왔음.

● GMO 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미국의 대형 먹거리 유통회사 중 하나인 홀푸드는 GMO에 대해 강도 높은 표시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 제철 먹거리, 유기농 먹거리의 품질기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해온 기업체 홀푸드(whole foods market)가 GMO 표시제를 선언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파장을 미치고 있음.
- 홀푸드는 GMO 식품의 위해성이 인정된 만큼 먹거리 선택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18년까지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홀푸드는 이미 3,300여개 품목에서 자체적으로 GMO 표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홀푸드 표시제가 업계 표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하지만 대다수 대형 식품업계는 GMO에 대한 표시제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음. 이들은 GMO 표시제의 의무화가 GMO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우리나라는 식품에서 GMO 성분 함유 5순위까지 표시 기준이 면제되어, 실제로 식품에서 GMO가 표시된 예를 찾기는 어려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4월 과자, 두부, 두유 등 135개 제품에 대해 GMO 표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8개 제품이 수입산 대두나 옥수수를 원료로 생산되었지만 GMO 표시를 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힘. 수입되는 대두 76%와 옥수수 49%가 논란을 빚고 있는 GMO지만 정작 시중에 GMO라고 표시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는 식품원료 구성 비율 5순위 이내 성분에 대해 GMO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며, 이에 대한 표시를 업계의 판단에 맡겨 놓고 있음.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은 변형된 유전물질(DNA)이나 외래 단백질 성분이 남은 식품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한편, EU는 GMO 성분뿐 아니라 GMO 작물로부터 추출한 첨가물이나 조미료를 함유한 식품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식품인증제도가 2000년 4월부터 발효되었음.
-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식품업계에 대해 유럽과 같은 수준의 GMO 표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유통과정 중에 GMO가 불가피하게 섞이는 비의도적 혼입률의 허용치에 대해서도 현재의 3%에서 유럽 수준인 0.9%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제품 내 원료 함량 5순위 이하 성분에 대해서도 표시 의무를 확대하며, 제품 내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함.

● '지속가능한' 음식 문화로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자

- 'Think, Eat, Save' 똑똑한 식습관, 지구를 구합니다

- 매년 6월 5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로, 1972년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관심 및 정책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한 이래 매년 주제를 정해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 및 행사를 열어왔음.
- 2013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Think, Eat, Save, Reduce your foodprint'로, 우리말로 '똑똑한 식습관, 지구를 구합니다'가 채택됨. 이 주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그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며, 식품 생산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음.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은 13억 톤으로, 유통 과정에서 손실되는 양까지 합하면 전체 생산의 3분의 1 가량으로 추정함.
- 한편, 유엔환경계획(UNE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1월부터 '지속가능한 음식 문화' 캠페인을 벌여 왔음. 오늘날 식료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산업 등 다양한 식품산업이 존재하며, 생활습관의 변화로 식생활 패턴도 복잡해짐.
- 따라서 식량문제를 농업을 포함해 생산, 가공, 유통, 소비라는 총괄적 시스템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 하에, 특히 소매업자나 소비자, 서비스업(음식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
- 식품 폐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적으로 연간 490억 톤에 달해 평균 기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식품폐기물 1kg 감소는 온실가스 894kg CO₂ 절감으로 이어짐.

- 식탁에 오르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들

- 우리나라에서만 버려지는 음식물이 연간 22조 원 규모이며, 이 중 보관·폐기되거나 먹지 않아 버려지는 식재료가 약 3조 원 규모에 이룸.
- 녹색소비자연대 발표에 따르면, 식품폐기물 발생 장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편의점(12%)이며, SSM(4%), 대형마트(3%) 순임. 폐기율이 높은 식품으로는 대형마트 경우 엽채류와 딸기, SSM은 엽채류와 생선류, 김밥, 편의점은 김밥, 도시락, 우유 등이었음.
- 이처럼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낭비되고 버려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이나 영양상 문제가 없는 유통기한 임박식품이나 선도저하 식품들의 소비촉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 그동안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에서는 신선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 사전 폐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음.

-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 .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통단계에서의 식품폐기물 줄이기 녹색소비행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 . 이는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에서 홀대 받아왔던 규격 외 농산물과 유통기한 임박 가공식품에 대한 스마트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매장별로 해당 식품 판매대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는 방식임.
- . 한편 6월 1일 '서울도시농업박람회'에서는 한국슬로푸드 청년 네트워크 주관으로 '요리가무' 이벤트가 열렸음. 버려지는 농산물의 가치를 재발견한다는 취지로 농가의 선별과 시장 유통과정 중 상품에서 제외되는 농산물을 활용해 음식을 만들고 나누며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먹거리 소비문화를 개선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 일본에서는 식품업체를 중심으로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연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일본에서는 현재 1년간 사용 원료의 2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톤의 식품이 폐기되고 있어, 용기 개선 및 안전성 재평가, 유통 시 반품 관련 제도 검토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의 폐기를 지칭하는 '식품 로스(loss)'가 1년에 500만~800만 톤이라는 분석이 있으며, 식품 로스의 감소를 식품업체에서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 이런 가운데, 사전 주문량에 따른 공급 체계를 채택하고 적체 물품에 대해 소비촉진 등의 활동을 펼치는 한살림 등 생협의 직거래 체계는 공급-수요 불균형에 따른 유통단계에서의 식품 폐기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 또한, 푸드뱅크(food bank) 등 식품의 공급과 실질적인 필요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연결시키는 일에도 생협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10가지 방법¹⁾

1. 똑똑하게 구입하라 : 식사를 미리 계획하고 그에 따른 쇼핑 리스트를 준비해 충동구매를 방지할 것
2. ‘재미있는’ 과일을 구입하라 : 크기와 모양, 색깔이 ‘규격 외’로 버려질 위험에 처한 과일과 채소들을 직거래 장터 등에서 구입할 것
3. ‘소비 기한’을 확인하라 : 대개의 먹거리들은 유통기한 이후에도 안전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참고할 것
4. 냉장고를 비워라 : 새롭게 구입하기 전에 냉장고에 있는 것을 먼저 먹고, 음식별로 다른 보관방법을 지킬 것
5. 냉동고를 활용하라 : 대개 열린 음식은 보관기간이 ‘무기한’ 늘어나므로 상하기 전에 먹기 어렵다면 냉동보관 할 것
6. 적은(적당한) 양을 주문하라 : 식당에서는 적당량을 주문할 것(일부 식당에서는 양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두기도 하니 이를 활용할 것)
7. 퇴비로 활용하라 : 남은 음식물들을 퇴비화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양분 순환에도 기여할 것
8. 선입선출(先入先出)하라 : 먼저 산 음식을 먼저 먹고, 오래된 음식은 가장 가까이에 둘 것
9. 남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 남은 치킨을 넣은 샌드위치, 남은 빵을 구운 크루톤 등 창의적 방법을 고안할 것(식당에서 남은 음식 포장하기를 주저하지 말 것!)
10. 음식을 기부하라 : 상하지 않은 음식은 지역의 푸드뱅크나 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것

1) NRDC(National Resources Defense Council), WRAP(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
e) UK

분야별 동향 2

경제 · 생활

● 사회문제가 된 비만, 세금을 매길 것인가 바르게 먹을 것인가

- 비만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음

- . 2004년 WHO가 비만을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분류하면서 세계적으로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비만 비율이 1.5배로 급속히 높아졌으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1조 8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최근에는 학생들의 15%가 비만이며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비만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되었음.

-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만세를 도입하고 있음

- . 2011년 세계 최초로 덴마크가 비만세를 도입한 이후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이 뒤를 이었으며, 최근 핀란드와 헝가리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탄산음료에 특별세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영국은 폭음을 막기 위한 최저 술값제를, 프랑스는 팜유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을 추진 중에 있음.
- .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비만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학교 현장에 부는 '채식급식' 바람

- .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 비만에 대처하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음. 외국의 경우 벨기에 헨트 시, 독일의 브레멘 시, 브라질 상파울로 시 등은 시정부에서 주 1일 채식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 학교에서도 채식 바람이 불고 있음. 대만은 85% 이상의 학교에서 채식급식을 실시하고, 미국은 전체 학교 67%에 채식식단이 제공되어 왔고, 지난 4월에는 뉴욕시 PS 244 초등학교가 공립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전면 채식식단을 제공하겠다고 선포해 화제가 되고 있음.
- . 우리나라도 2009년 제주도 의회와 시민단체가 유기농 비건 채식을 선언하고 유초·중고교에서 주 1회 채식을 실시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일부 학교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음.
- . 또한 2011년에 전북도가 20여개 학교에 '채식의 날'을 시범 도입하고, 2012년 42

개교, 2013년 57개교로 시범학교를 늘려옴.

-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1만여 명의 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채식의 날' 운영을 시작했고, 향후 25개 자치구와 산하 사업소, 초·중·고교, 민간기업 등 2,999개소를 대상으로 '채식의 날' 운영을 확대할 방침임.

- 비만 억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

- 서울 영림중학교에는 국내 최초로 협동조합형 친환경매점이 등장했고, 경기도 교육청도 친환경매점을 추진하고 있음. 또 미국에서 시작된 0교시 체육이 수업집중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국내 초중고교에도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비만 억제 노력들이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계화된 식품의 생산-소비 체계와 현대적 생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임.

● 갈수록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서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²⁾

- 가계부채의 증가 추이

- 2003년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계층에 집중된 신용카드 부실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건전성 감독 규제를 강화하면서 저신용 차입자의 상당수가 부채상환을 위한 차입(이른바 '돌려막기')이 어려워져 상환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가계부채에 의한 금융불안 상황을 겪게 됨.
- 가계부채는 2003년~2004년에 조정기간을 거친 후 2005~2007년 기간 중에 매년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평균 8~9%로 증가하여,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2년 말 131%에서 2011년 말 164%로 33%p 증가함.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2년 74%에서 2011년 89%로 15%p 증가함.
- 2012년 말 현재 가계부채는 959조원으로, 2011년말 912조원에 비해 5.2% 증가함. 여기에 영세사업자나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 등을 합산한 실질 가계부채는 1,098조5천억 원으로, 전년의 1,046조4천억 원보다 52조 1천억 원이 급증했고, 2000년대 초반 600조 원 수준에 비교하면 10여 년 만에 2배가 되었음.

- 최근 가계부채 총액은 감소했으나 가계부채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음

2) 이 내용은 한국은행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3.4)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2013.3) 보고서를 참고로 요약정리 하였음.

- . 2011년 대비 2012년에 가계부채 총액은 증가했지만 증가 속도는 소폭 둔화됨. 2013년 1/4분기에는 가계부채 총액도 감소해 전년도 4/4분기 963조8천억 원보다 2조2천억 원 감소한 961조6천억 원으로 집계됨.
- . 그러나 소득보다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음. 2010년 이후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0년 7.4% 증가에서 2012년 3.8% 증가하는 데 그침. 민간소득(가계+기업)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80.6%에서 2012년 72.8%로 크게 하락함.
- . 이와 함께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1년 말 47.3%에서 2012년 말 현재 49.1%로 1.8%p 상승했고, LTV가 60%를 초과하는 비중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세임. 2012년 말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및 신용대출 연체율은 각각 0.74%, 1.37%로 2011년 말에 비해 각각 0.13%p, 0.32%p 상승함.

- 신용 양극화(credit divide)로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짐

- .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으나 2007년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인해 은행대출은 둔화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중이 2006년 33%에서 2011년 40%로 높아짐.
- .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구조조정 여파로 크게 감소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보완대책에 힘입어 은행과 비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1년에 비해 하락했지만, 새마을금고 경우 2012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10%를 상회하는 등 비은행권의 비중이 높은 편임.
- . 또 금융기관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해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7~10등급)들이 점차 비은행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비중이 상승해, 2012년 말 현재 저신용자 대출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비중이 각각 65.5% 및 5.5%로 2010년 말에 비해 각각 0.8%p, 0.9%p 상승함. 이런 가운데 대부업체를 낀 다중채무자의 수와 다중채무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 또한 고신용자의 금리 격차는 9.7%p인 데 비해 저신용자의 경우 19.6%p로, 고신용자에 비해 금리 격차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대비 이자 비용 및 비율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다

-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어린이 행복 지수가 OECD 23개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남

- . '국제 어린이 행복종합지수 평가'에서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고, 평가 대상 8개 국가 중 6위인 알제리(한국 GDP의 1/5) 다음 순위인 7위를 차지함.
- . 우리나라 어린이는 괜찮은 옷, 개인 컴퓨터, 인터넷 접근권, 휴대전화의 4가지 품목 중 평균 3.83개를 가진 것으로 조사돼 8개국 평균치인 3.36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의 경제 여건 만족도는 8개국 중 7위(98.4점)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 지표를 달리해 시도별로 행복지수를 비교한 결과 행복지수 상위권은 대전(1위), 충북(2위), 서울(3위), 부산(4위), 인천(5위), 울산(6위) 등 대도시들이 차지함. 반면 전남(14위), 전북(15위), 경북(16위)로 비도시 지역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얼핏 대도시가 농촌지역에 비해 '생활환경'이나 '경제여건'이 우수해서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분석 결과를 보면 어린이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부모·또래관계', '여유·아량', '행복·만족감'인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환경'이나 '경제여건'은 100점 만점에 각각 59.1점과 16.9점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 왜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 . 어린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또래관계'가 중요하다고 나타났지만, 현실은 비관적임.
초·중·고 학생 10명 중 7~8명은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 충동을 경험했고, 부모님과의 갈등은 자살충동 경험 이유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 또래와의 관계도 좋은 편이 아님. 초등학교 7명 중 1명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학교폭력을 경험한 경우 가출 및 자살충동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 특히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둘 다 경험한 초등학교 2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꼈으며 이 비율은 중학생, 고등학교의 경우 7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 어린이·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학교에서 갈등과 폭력이 빈번한

가운데, 한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7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 OECD 31개 국 아동·청소년(10~24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00년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10년 새 16%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6.4명에서 9.4명으로 47% 증가하여, 2000년 18위에서 2010년 5위로 올라섬.
- . 스트레스 인지율도 높은 편임. 남학생 10명 중 3명, 여학생 10명 중 5명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남학생의 67%, 여학생의 77%가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런 가운데 아직도 많은 부모들은 20~30년 전 자신들이 학교를 다니던 때에도 가정과 학교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잘 버텨낼 수 있었듯이 현재 아이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나날이 높아져가는 아동·청소년 자살률과 정신질환 등은 현재 상황을 여유롭게 지켜볼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 또한 아이들은 지금은 행복감이 낮지만 미래의 행복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현재 상황을 정당화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현재 어른들의 삶도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임. 최근 조사에서 36개 OECD 국가 중 한국의 행복도가 27위로 나타났고, 안전(9.1), 교육(7.9), 사회참여(7.5) 부분에서는 높게 나타났지만, 공동체(1.6), 소득(2.1), 삶 만족(4.2)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 한국은 OECD국가 중 9년째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2위 수준임. 이런 가운데 초중등학생 10명 중 7명이 '멘토'나 '롤(역할) 모델'이 없고, 희망하는 직업은 초등교사, 의사, 공무원 순으로 답함. 주위에 모범을 보이는 어른 없고, 사회적 추세에 따라 안정적인 직업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 .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에서 2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개별 가정이 아이를 책임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 돌봄과 나눔, 배려와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생활공동체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일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노력과 잘 만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본 사회적기업의 현재와 전망³⁾

- 사회적기업의 영업 이익은 감소했지만 생존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이 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사회적기업실태조사보고서'(2012) 내용을 요약정리 한 것임. 원문 다운로드(<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지난 5년간(2007~2011) 사회적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을 낸 비중은 73%에서 14.1%로 감소함.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곳도 80.0%에서 63.5%로 감소함. 반면,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 가운데 2011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82.7%로 나타났고, 2009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100%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음.

· 통계청의 신생기업 생존율이 3년 후 41.2%, 5년 후 30.2%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음. 경제적 자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자립했다'(20.4%), '앞으로 자립할 수 있다'(56.7%) 등 77.1%가 자립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종사자의 2/3 가량은 전일제 근로자이지만, 지속고용률과 임금 수준은 낮은 편임

· 사회적기업 전체 종사자 실태를 보면 "기혼 여성으로 30세에서 60세 미만이며, 고졸과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재직자"가 다수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고용인원은 2,539명에서 15,990명으로 급증했지만, 평균 고용인원은 49.8명에서 25.3명으로 크게 감소함. 인건비 지원이 계속되는 경우 50%의 기업은 지속고용률이 9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원이 종료된 기업의 고용유지율은 31.5%에 불과함.

· 종사자 가운데 72.3%는 전일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근로시간 '40~50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종사자가 81.6%로 나타남.

· 임금수준은 50~100만원 미만이 39.6%이고, 100~150만원 미만이 34.2%로 나타나 응답자의 73.8%가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사회적기업의 절반 가량은 현재 당면한 어려움으로 판로 개척을 꼽고 있음

·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판로개척'(45.8%),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족'(17.3%), '근로자의 역량 부족'(12%) 순으로 나타남.

· 경영상 애로요인은 첫째, 시장조사 및 고객확보, 둘째 사업성과 시장성이 있는 아이템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존립과 관련해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은 '공공기관 우선구매'(14.8%), '사업비 지원'(14.3%), '시설비 지원'(13.0%), '인건비 지원'(12.6%) 순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직접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것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로 지원 하거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중간전문기관의 설립, 성장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회적 기업가 교육 과정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 현재 사회적기업 가운데 약 100개 이상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 . 한편, 다른 형태로의 조직 전환 계획이 있는 사회적 기업가 72.7% 가운데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가는 74%이고, 이중 84.5%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의사를 밝힘. 현재 사회적기업 수를 고려하면 적어도 100개 이상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
- . 이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기에 적합'(49.5%), '직원이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어서 주인의식이 더 강화됨'(32.7%)을 꼽았고, 단점으로는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고 효율성이 낮음'(65.3%), '주식회사형 사회적기업에 비해 자본조달에 불리함'(20.0%)을 꼽고 있음.
- . 전환의사를 밝힌 사회적기업의 주요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37.0%), '취약계층의 자활자립'(29.0%),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13.0%) 순으로 나타남. 지역사회 기여형 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혼합형협동조합이나 에너지 및 환경개선 분야 등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협동조합 설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 협동조합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음
- .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5개월 만에 1,092개의 신청(신고)건수가 집계 됐고, 이 가운데 인가(수리)된 협동조합은 946개임. 종류별로는 사회적협동조합 24개, 일반협동조합 919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3개임.
- . 지역별로는 서울(263개), 광주광역시(116개), 경기도(110개), 부산(68개), 전북(59), 전남(45)순으로 일반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음. 전체 신고건수(일반협동조합) 대비 수리건수를 보면 설립율이 89.7%로 나타나 대부분 신고요건만 갖추면 큰 어려움 없이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 가장 숫자가 많은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액이 작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며, 평균 출자금액은 17,977천원으로 나타남. 설립동의자 수는 평균 14명이고, 유형별로는 '사업자형'(51.6%), '다중이해형'(19.3%), '직원형'(11.3%), '생산자형'(8.9%), '소비자형'(8.8%) 순임. 업종별로는 '도소매'(26.3%), '농림어업임업'(11.8%), '교육서비스'(9.1%), '제조'(7.4%)순으로 나타남.
- . 서울시 소재 일반협동조합의 경우⁴⁾ 일반 소상공인의 업종 구성과 조금 다른 면이 있음. 즉,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나지만, 숙박음

식, 교육,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중 숙박음식업은 5년 내 폐업률이 70%가 넘고, 창업 대비 폐업률이 94.3%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일반협동조합 비중이 낮은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임.

<서울시 일반협동조합과 소상공인 사업체와의 업종 구성 비교>

분류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건설	제조
소상공인 사업체(A)	29.2%	21.2%	2.99%	2.4%	9.6%
일반협동조합(B)	24.3%	2.3%	12.2%	3.0%	4.2%

출처: 2013 서울시 협동조합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재가공

- 서울시 경우 2011년 기준 폐업률이 평균(85.0%)보다 높은 '소매업'(89.3%)과 '도매업'(87.4%) 비중이 높은 점은 다소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전국에서 각각 2번째와 6번째로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된 광주와 전남 지역은 간이사업자의 창업대비 폐업률이 99.3%로 전국(95.9%) 보다 높은 편인데다, 도소매업 비중이 20%에 이름.
- 소상공인 업체와 협동조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조합원의 필요를 조직해 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생협 방식과 달리 일반 협동조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업자형과 생산자형, 직원형 형태의 협동조합임. 따라서 이들이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조합원의 주인의식과 끈끈한 결속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임.

4) 전국적으로 업종 분류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여기서는 일반협동조합이 가장 많은 서울시 자료만 재가공함.

분야별 동향 3

사회 · 환경

● 생태계 위기의 신호, '꿀벌'을 살려내자

- 식량 생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꿀벌

- 꿀벌은 곤충에 의한 수분(受粉) 중 80%를 차지할 만큼 식물이 열매를 맺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 인간이 식량으로 먹는 100대 작물 가운데서도 71%가 꿀벌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꿀벌이 세계 농업에 기여하는 가치는 2030억 달러(약 224조원)에 달하며, 아몬드, 당근, 양파 등의 작물은 꿀벌에 수분을 100% 의존함.
- 환경단체 '어스 워치'는 꿀벌을 대체 불가능한 생물 5종 가운데 첫 번째 종으로 꼽은 바 있음.

- 꿀벌의 개체수 감소와 집단적 사라짐(군집붕괴)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지난 겨울 꿀벌 군집의 31%가 줄어들었고, 영국 내 꿀벌 개체 수가 최근 25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유엔환경계획은 '꿀벌 감소 현상이 빨라질 경우 생태계 교란은 물론 식량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함.
- 국내에서도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해 2006년 40만 봉군이 넘던 꿀벌이 지금은 3만 이하로 떨어짐.

- EU 차원에서 꿀벌을 살리기 위해 살충제 금지 결정을 내림

- 지난 4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꿀벌의 신경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살충제 농약 3종을 EU 내에서 2년간 사용금지한다고 발표함. 꿀벌의 죽음에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2년의 금지 기한을 정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 EU의 이번 결정은 꿀벌의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들음에 따라 식량 생산에 타격을 줄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임.
- 이런 결정에 대해 독일의 바이엘과 스위스 신젠타 등 일부 기업과 농업 관계자들

은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성급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는 EU의 평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을 시 새로운 살충제 사용 기준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힘.

- 꿀벌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노력과 도시양봉의 등장

- 꿀벌의 사라짐 현상에는 살충제 외에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전자파에 따른 교란 등 다양한 원인들이 지목되고 있음.
- 꿀벌이 사라지면 꿀벌을 대신해 인공수분을 해야 하는 과수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실제로 2011년에는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로 과일과 채소 값이 폭등하기도 했음.
-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생태계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환경 위기의 지표 곤충으로써 꿀벌의 생태에 대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음.
- '꿀벌의 위기가 곧 문명의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도시양봉'이 일본과 미국, 덴마크 등 전 세계 대도시에서 몇 해 전부터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음.
- 서울에서도 작년 시청 옥상에 처음 벌통을 놓은 것을 시작으로 도심에서 꿀을 생산하는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 '서울시 장애인 도시양봉단'과 '서울도시양봉협동조합'이 만들어져 활동을 하고 있음.
- 하지만 꿀벌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단순히 꿀벌을 도시 공간 속으로 가져오는 차원을 넘어서 도시 생태계 전체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돌고래의 엇갈린 운명, 제돌이의 귀향과 계속되는 돌고래쇼

-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 제돌이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지난해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잠정적 중단과 불법포획 된 '제돌이' 방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5월 제돌이가 4년 만에 제주 앞바다로 돌아감. 앞으로 적응 훈련을 거쳐 이르면 6월 말 야생 방류될 예정임.
- 서울대공원에서는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기존의 돌고래쇼를 생태 설명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함. 하지만 이는 사실상 축소판 돌고래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여전히 있음.

- 한편,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불법 어획해 공연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제주의 한 돌고래쇼장에 올해 초 대법원 몰수형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
- 사법 판결과 방류 결정, 실제 방류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방류를 위해 이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모금을 통해 마련하기도 했음.
- 또한 최근 '거제 씨월드'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북극 흰고래 수입을 신청했으나 환경부에서는 사육 환경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례적으로 반려함. 동물복지 문제로 수입을 불허한 것으로 의미 있는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음.

-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동물들과 체험관광의 현실

- 전시와 공연을 위해 수족관 안에서 길러지는 돌고래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거제 씨월드에서 일본 다이지의 큰돌고래 4마리를 수입하는데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허가의 방침을 내놓아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 다이지는 연간 2,000마리 안팎의 큰돌고래를 잡아 판매하는 '돌고래 수출지'로, 사냥 방법의 비인도성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세계적 비난을 사고 있는 곳임.
- 큰돌고래 한 마리의 값은 대략 1억 원에 이르나 훈련을 거쳐 공연에 쓰일 경우 수억 원의 이윤을 창출해내 수족관 업체들을 중심으로 계속해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거제 씨월드 측은 '거제 돌핀파크' 사업을 통해 돌고래를 보호하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나, 하루에 수백킬로미터를 헤엄치는 돌고래를 '볼거리' 제공을 위해 좁은 수족관에 갇혀 지내도록 하는 것은 동물권 존중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세계적으로도 EU 소속 국가의 절반이 수족관과 돌고래쇼를 금지하는 등 동물을 이용한 오락 문화를 지양하는 추세인데,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동물전시나 관광체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인권에서 동물권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길 찾기

- 현재 제돌이를 비롯해 자연방사되는 남방큰돌고래가 돌아가게 될 제주앞바다 김녕마을 주민들은 '돌고래 야생방사에 따른 어장 사용 동의 건'을 어촌계 총회에서 승인했으며, 돌고래와 상생하는 '돌고래 관광'을 준비하고 있음.
- 5월 30일에는 '바다의 날' 기념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려 천연기념물 지정 및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무분별한 남획과 혼획 등 여전히 존재하는 동물에 대한 다양한 위협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야 함. 다만 생명 감수성은 훈련된 동작을 보거나 직접 만져보는 '체험'이 아니라 생물종 고유의 서식환경과 생태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길러진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 카라(KARA)는 <동물사랑교과서>를 발간하면서 동물들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인간성을 되찾고 자연과의 공감 능력, 감정적 유대 관계, 친밀감, 정서적 지원 관계 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단순한 '동물 보호'의 차원을 넘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생태적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에서 동물권으로 의미를 확장시키고, 이것을 통해 동물을 포함한 온 생명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터득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계속되는 원전사고

-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어 왔음

- 밀양 송전탑 공사가 문제가 된 것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2007년 11월, 정부가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승인하였고, 이듬해 밀양주민들이 첫 권기대회를 개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 2009년에 갈등조정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보상제도 등을 두고 수차례 회의를 거치는 가운데 현재까지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공사 계획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에 이르는 90.5km 구간에 765kV 송전탑 161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와 창녕군은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밀양시 4개면에 52기 건설을 남겨둔 상태임.
- 이런 가운데 한전의 공사 강행 배경에 'UAE와 맺은 원전 수출 계약 조건'이 있다는 사실이 한전 부사장의 발언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자 당사자가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함.

- 갈등의 쟁점은 '보상'이 아닌 '삶의 터전' 문제

-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온 각종 개발 사업들은 해당 지역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역사회 마을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다주었음. 따라서 4대강, 골프장, 송전탑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반대해 온 지역주민들 요구의 핵심은 '그동안 살아온 터전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임.

-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역시 '보상금이 아닌 지중화 등을 통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개발사업 주체 측의 무성의와 정부와 정치권의 조정능력 부재 속에 8년간 지속되어 온 갈등이 다시 폭발하자 뒤늦게 당정이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
- 협의체는 정부, 밀양 주민, 국회 추천 각 3명 등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송전탑 건설 대안으로 주민들이 제시한 우회 송전, 지중화 작업 등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함.
- 이런 가운데 연말 가동을 목표로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송전탑 건설을 강행해 온 정부와 한전이 원전 핵심부품의 불량품 납품 사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 이번에 문제가 된 불량부품 납품 사건에 밀양 송전탑 건설의 원인이 되었던 신고리 3호기도 포함되었기 때문임.
- 한편, 지난 5월 24일과 25일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으로 탈핵희망버스가 출발했으며, 한살림에서도 탈핵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한살림 탈핵희망버스를 운행해 고리원전을 방문한 바 있음.

● 남극을 위기로부터 구하는 방법⁵⁾

- 남극바다에서 온 메로

"메로의 실제 이름은 '이빨고기'(Antarctic Toothfish)입니다. 이들의 서식처인 남극은 지리적 격리와 극한의 기후로 지구상에서 손상되지 않은 바다이며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들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태고의 생태계가 살아있으며 살아있는 실험실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이 "고단백질, 고불포화지방산" 건강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로(이빨고기)의 서식지라는 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극해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지요."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 남극조약체계 하에서 1980년 남극주변 해역에 생물종 남획에 따른 여러 생물종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이 체결됨.
- 본 협약에 의해 설립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남극해양생물자

5) 이 글은 환경운동 차원에서 남극보존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숙현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가 정리하였다.

원과 남극해양생태계에 관한 조사와 포괄적 연구 촉진', '자원량의 변화와 분포, 풍요도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자료 수집', '어획자원에 대한 어획량과 어획노력량에 관한 통계치를 확보하여 보존조치 작성·채택·수정',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85년 4월 협약에 가입하여 17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2012년 말 현재 EU를 포함하여 총 25개 회원국이 있음.

- 남극해의 위기 : 기후변화

-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가 남극지역에 불균형한 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서남극 일부지역은 지난 50년간 평균온도 2.8℃가 증가한 반면 남극의 타 지역은 기온이 내려가기도 함.
- 빙봉의 붕괴와 해빙의 쇠퇴: 일부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으며, 대륙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해빙 시기가 단축되는 등 변화가 발생하여 얼음 밑 미생물을 먹고 자라는 유생 크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해양 산성화: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의 증가분 중 해양으로 흡수된 탄소에 의해 바닷물의 산성화가 진행 중임. 과학자들은 지난 200년간 해양이 30% 산성화 되었고 석회질 유기체의 껍질과 골격을 용해시키거나 이것을 형성하는 능력을 방해하여 20년 이내에 익족류(미세한 해양 달팽이 등)와 같은 주요 플랑크톤 종들이 더 이상 튼튼한 껍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함.

- 남극해의 위기 : 어업

- 물개, 코끼리 해표, 대형 고래의 어류사냥으로 시작된 어업으로 19세기 말 일부 물개종류는 멸종했으며, 20세기 후반 일부 고래가 상업적 포경으로 멸종위기에 처함.
- 크릴: 새우처럼 생긴 갑각류로, 먹이사슬의 하위 생산자로서 생태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강보조제와 양식장 먹이, 오메가3기름 생산 등으로 어획이 크게 증가함.
- 이빨고기(메로): 남극 심해의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획은 90년대 중반까지 총 10만 톤을 초과하였으며, 개체군의 심각한 감소로 어업금지 조치가 뒤따랐고, 이 중 2/3가 불법적인 것으로 추정됨. 이후 '남극 이빨고기'를 잡기 위해 심해자망이 사용되면서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자 이것을 금지시킴. 유령그물이 된 자망 중 호주 당국에서 발견한 것에는 130km에 달하는 것도 있음.

- 한국의 남극해 어업

- . 1978~79년 남극해에서 첫 크릴탐사 조업을 시작한 한국정부는 78년에서 92년까지 약 4백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원양업계에 지원하여 시험조업을 함.
- . 1992년 인성실업이 처음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조업을 시작한 후 현재 로스 해로 조업어장이 확대됨.
- .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어획량 규모로 3위, 남극해 총 어획량 기준 2위 국가임. 2007년의 경우 최대의 어획량으로 남극해양생물자원위원회에 최고 금액의 입어료를 지불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뉴질랜드와 함께 로스 해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남극 이빨고기'를 어획하고 있음.

- 남극해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과 잦은 사고

- . 2009년 인성 1, 2호의 위반행위 적발(스트리머 최소길이 위반, 표지부착방류의무 위반), 2010년 표부착방류 비보고 및 불성실 보고 등 조처위반 이후 인성 1호가 로스 해에서 침몰해 42명 중 22명이 사망 및 실종, 2011년 인성 7호가 로스 해에서 이빨고기 제한 어획량의 4배 불법남획으로 다음 해 출어기 조업금지 명령이 내려짐.
- . 2012년 인성 2호가 단위노력당 어획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 발각됨. 흥진 701호(인성 자매회사) 어구부표 선박식별 표시 의무 위반, 선우실업 소유의 정우 2호 화재 발생으로 3명의 선원 사망, 7명 부상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설정 노력

-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협약 제9조 2항에 따라 과학적 연구 또는 보호 목적을 위한 구역의 개방과 폐쇄 지정으로서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근거를 마련.
- . 2011년 CCAMLR는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기준에 동의하고, 2012년에 로스 해와 동남빙양의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협상하였으나 일본,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반대로 해양보호구역 설정이 무산됨.
- . 2013년 7월 CCAMLR는 임시회의를 열어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재협상하기로 결정함.
- . 남극보호연합을 비롯한 국제 환경운동단체들은 남극해보존연대(Antarctic Ocean Alliance)를 결성하였고, 한국에서는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남극해양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운동을 통해 7월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지지의사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예정임.
- . 남극해에 해양보호구역이 설정될 경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시된 2020년 세계 해양의 10% 보호 목표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예상됨. 온라인 서명은 '남극해보존연대' 웹사이트(<http://www.antarcticocean.org/ko>)를 통해 상시 가능함.

분야별 동향 4

정치·사회운동

● 국민연금 불법무기투자, 국민연금은 협동조합에 투자하라!

- 죽음의 무기, 확산탄

- . 확산탄은 공중에서 폭발해서 많은 작은 폭탄들을 흩뿌리는 폭탄으로 군사목표와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넓은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끔찍한 살상무기임. 확산탄 피해자 중 98%가 민간인이고 이중 1/3이 어린아이를 알려짐.
- . 확산탄의 비인도적인 피해로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탄금지협약이 추진, 체결되었고 2010년 8월부터 이 협약이 발효되고 있음. 이 협약에 따라 확산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었고, 2013년 4월까지 전 세계 80개국이 협약을 비준한 상황임.
- . 확산탄의 사용을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 7개국은 확산탄에 대한 각종 투자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7개국 외에 21개국도 확산탄금지협약에 의거 투자를 금지한다는 해석성명을 발표함. 실제로 노르웨이 연금기금이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풍산'과 '한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것도 이런 윤리지침에 따른 것이었음.
- . 그런데 확산탄에 대한 전 세계 투자현황이 기록된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2012년 6월 개정판)에 따르면 한국의 '한화'와 '풍산'은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임. 그리고 이 두 기업에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 '국민연금'이라 기록됨.

- 무기생산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로

- . 2011년 말 국민연금은 세계 4대 공적연기금으로 성장함.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 행복에 공헌하겠다는 국민연금공단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무기생산에 투자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임.
- . 더구나 국민연금은 투자할 때 투자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에 2009년 7월에 가입했음.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임경영, 윤리청렴경영, 사회공헌, 동반성장 등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음.
- . 전 세계적인 흐름과 자신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국민연금은 무기나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생산하는 대기업보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투자해야 함. 그러나 국민연금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벤처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었음.

만일 국민연금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국민연금이 미래를 파괴하는 생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기모순임.

. 그런 의미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국민연금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우리의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

※ 참고: 무기거래를 감시하는 단체 <무기제로>의 '국민연금에 보내는 공개서한'

● '을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

- '갑질'의 폭로와 연이은 사과

.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물건판매를 강요하며 욕설을 퍼붓는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음.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떠넘기는(심지어 유효기간이 다된 물건을 넘기는) 소위 '밀어내기'가 여론의 관심을 받음. 이에 반발해 점주가 대리점을 접으면 본사에 낸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억지로 받은 물건대금을 본사로 송금함.

.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남양유업은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대리점을 지원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음. 그리고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연합회를 만들어 본사에 대항하고 있음.

. 문제는 이런 관행이 남양유업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임. 지난 5월, 전통주를 판매하는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의 제품 강매와 빚 독촉을 더는 못 견디겠다', '남양유업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

배상면주가는 '그런 일 없다'며 발뺌하다 뒤늦게 전통술 시장이 나빠져 밀어내기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함. 이 외에도 올 한해에만 편의점주 4명이 자살하면서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밀어내기만이 아니라 경영자의 오만한 태도도 시민들의 분노를 샀. 프라임베이커리 회장이 차를 빼달라는 호텔 노동자의 빵을 지갑으로 때린 사실이 드러나 불매운동이 시작됨. 이 회사가 만든 빵을 대부분 납품받던 코레일이 잠정적인 납품 중단을 선언하자 소위 '빵 회장'은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선언함. 현재 빵 회장은 직원들에게 몇 달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고발당한 상태임.

- 을의 반란이 성공할 수 있을까?

- .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조직화되자 언론은 이를 '갑을전쟁', '을들의 반란'이라 부름.
- . 그런데 이런 운동이 말처럼 전쟁이나 반란이라 불리려면 해당 상품이나 상표에 대한 불매운동과 타 회사 제품 구매라는 차원을 넘어선 다음의 전략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그런 과정은 보이지 않고 있음.
- . 또한, 해당 영업사원을 해고하고 회사를 문 닫게 만들면 '을의 반란'이 성공한 것이라 봐야 할까? 회사경영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회사의 잘못된 관행이나 불공정한 문제로 일자리를 잃는 게 좋은 일일까? 회사의 잘못된 관행의 결과가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임.
- . 그리고 사고가 터질 때마다 문제의 해당 기업은 사회 환원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중요하다지만 이것이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다면 사회정의를 실현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더구나 최근 조세도피처 명단공개로 재벌가들의 불법조세회피 액수가 엄청난 규모로 드러나는데, 기업주가 노동자들과 합의 없이 사건 무마용으로 선심 쓰듯 자신들이 축적한 부를 사회 환원으로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음.
- . 또한 소비자로서 문제가 된 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임시방편에 가까운 처방이라 할 수 있음. 즉 생산에 개입하지 못하는 소비자운동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 그런 점에서 소비자들은 기업의 민주화, 경제 민주화를 노동 영역과 함께 고민해야 함.
- . 을의 반란이 제대로 조직되려면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협동조합의 문제의식이나 경험과 맞닿아 있음. 소위 '갑질'을 막으려면 을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지만 갑 자체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함. 갑을이 없는 사회는 협동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 되었을 때 가능할 것임. 최근 갑을 관계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가능성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감정노동, 감정도 강요가 되면 노동이 된다

- 라면상무와 감정노동의 현실

- . 얼마 전 포스코의 한 상무가 비행 중에 "라면이 익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스튜어디스를 모욕, 폭행하는 일이 발생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면서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 사회문제로 대두됨.
-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계, 식당이나 술집 같은 외식업계, 콜센터나 공

공부문의 서비스 업계 등에서 “매우 만족했다”는 고객의 평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이 겪는 감정노동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짐. 노동과정의 스트레스로 지난 4년 동안 정신질환 자살자나 산재신청 횟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함.

·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나라 감정노동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에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감정노동이 ‘감정적 부조화’(자아의 이중화), ‘낮은 직무만족’(높은 직무 스트레스), ‘정신적 고갈’, ‘스트레스’로 음주, 흡연, 약물, 도박 중독을 불러온다고 지적함. 사례조사 결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절반 정도가 가벼운 우울증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감정노동도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감정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으로 분류됨. 엘리 러셀 혹실드는 항공 승무원의 노동을 분석한 결과⁶⁾ “자본주의는 감정관리를 사용할 방법을 찾았고, 그렇게 감정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면서” “감정노동을 경쟁과 연결 짓고, 실제적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광고하고, 그런 미소를 만들도록 노동자를 훈련시키고, 노동자들이 미소를 만드는지 감독하고, 이런 활동과 기업의 이익 사이의 연결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함.

· 특히 혹실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 관리를 더 많이 한다는 증거를 찾아내서 감정노동이 남녀의 성 역할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함. “세상은 여성에게 어머니 노릇을 요구하고, 이 사실은 묵묵히 직무 내용의 많은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 감정노동은 주로 여성, 나이로 보면 30대 이하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남. 판매·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수가 약 314만 명인데, 서비스 종사자의 약 66%, 판매 종사자의 약 50%가 여성임. 특히 전화로 고객을 상담하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100만 명의 상담원 중 약 89만 명이 여성으로, 이런 현실을 고려해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2012년에는 ‘여성감정노동자 인권수첩’을 발간하기도 함.

- 매장에서 감정노동 문제, 생협은 어떻게 봐야 하나

· 영리형 매장은 물론이고 생협에서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감정노동이 없을까? 생협마다 매장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하고 웃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조합원들은 생협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반 마트의 직원처럼 대하면서 감정노동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감정노동이 사회문제가 된 시점에서 생협들도 이런 질

6) 엘리 러셀 혹실드 저, 이가람 역, 2009, 『감정노동』, 이매진.

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되었음.

- 앞서의 임상혁 소장은 고객에게 무조건 사과를 하라는 방식의 매뉴얼이 아니라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수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침 등을 담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생협에서도 이런 매뉴얼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른다면, 조합에 감정은 넘쳐흘러야 하지만 그것이 노동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될 것임. 생협에서 매장의 비중과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형 매장과 다른 생협 매장이 가진 특성과 의미를 조합원들이 구분해 내지 못하면 감정노동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해당 생협이 지향하는 가치와 매장이 서로 어떻게 의미 있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잘 전달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음.

● 청년 극우화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 일베만의 문제인가?

- ‘일간베스트 저장소’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줄임말인 ‘일베’가 사회적인 논쟁의 중심으로 등장함. 2009년에 만들어졌고 대표적인 우파 사이트로 불리는 일베에는 하루 동안 게시물을 조회하는 수가 400만을 넘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그런데 그동안 게시판을 통해 여성,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의 소수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잦던 일베에서 최근에 광주 5.18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사건의 사실을 왜곡한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고소고발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베만의 특징이 아닌 것이 문제임. 일베의 등장은 사회 전반의 보수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고, 특히 경제적, 문화적인 면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층의 확대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체계적으로 교육이나 사상 주입으로 보수화된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기존의 권위에 대한 파괴적인 성향으로 이어진 결과라 할 수 있음. 그래서인지 ‘힘’에 대한 강한 욕망을 보임.
- 하지만 과거에는 보수적인 분위기에서도 민주화를 외치며 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논리로 일베의 등장을 분석하는 것은 단편적일 수 있음. 일본에서도 ‘넷 우익’이라 불리는 집단이 세를 불리고 있고, 유럽에서도 인종주의가 더욱 강해지는 등 현실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따라서 논란 이후 중앙 일간지들이 일베를 문제집단 집합소로 몰아세우고 있는데, 이는 우리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을 놓치게 할 수 있음.
- 실제로 최근 밝혀진 것을 보면 일베에는 교사나 의사 등 다양한 직종과 연령층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어, 사회적 배제자들의 집단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음.

- 누가 일베인가?

- . 일베가 대중의 관심을 받은 건 한 걸그룹의 멤버가 방송에서 “저희는 개성을 존중하는 팀이거든요. ‘민주화’시키지 않아요.”라고 말한 일 때문임. ‘민주화’를 ‘반대’나 ‘싫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일베의 어법을 사용한 것임.
- . 일베가 문제되자 민주당의 몇몇 국회의원은 일베의 운영을 법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했고, 광주시는 광주와 관련된 발언을 한 일베 회원을 고소하는 입장을 취함. 이와 관련해 한편에서는 이런 방식의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더 큰 위험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 문제는 냉소와 분노가 동시에 공존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상식으로 평가되기 어렵고, 실체를 드러낸 극우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잠재된 냉소하는 사람들임. 그러니 이들을 법으로 처벌하거나 또는 무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님.
- .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폭력에 가까운 발언과 그 말을 통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쾌감을 느끼려는 태도는 지극히 위험해 보임. 하지만 그 극도의 위험성은 불안감의 정점에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함. 우리의 아이, 가까운 동료나 이웃이 일베의 회원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물론 ‘우리 속에도 일베가 있으니 모두가 내 탓’이라는 주장도 문제가 있음.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개인화해서 어떤 사회적 조건으로 만들어내곤 함. 가령 어려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 순간적 분노로 범죄를 저지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해 문제의 원인을 그 사람의 성장과정 탓으로 돌리곤 했음. 최근 일베 사이트에 ‘인증’이 자주 올라오는 건 그런 규정에 대한 반감의 표시이기도 함.
- . 결국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타자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할 수 있을 때 신뢰와 연대의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임.

한살림 협동운동의 '비밀'

- '생-소-하나' 원칙과 새로운 사회·경제 -

“한살림은 협동조합 맞나요?” 한국사회에 협동조합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한살림도 많은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립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형 협동운동의 개척자”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분명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인데도 말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인데 뭔가 달라 보이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한살림은 유별난 협동조합입니다. 1988년 ‘한살림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을 창립했고, 1993년 한국 최초로 ‘생활협동조합’이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는 소비자끼리 생산자는 생산자끼리 결집하는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틀을 넘어서려 했습니다. 그 특별함의 바탕엔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라는 대원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 한살림 협동운동의 대원칙

한살림 협동운동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입니다(앞으로는 간략하게 ‘생-소-하나’라고 쓰겠습니다.). 한살림이란 말 자체가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본래 ‘한살림’, 즉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쓴故박재일 회장님의 편지가 절절합니다.

“원래 생산과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돕는 사이인데, 현실은 서로 갈등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중략) 땅과 사람, 물건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못 믿는 사이가 되는 삶이 살림의 삶 일까요, 죽임의 삶일까요? 농산물 값이 내려가면 농민은 울고 소비자는 좋아하고,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울고 농민은 좋아합니다. 이처럼 다른 이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옳은 삶일까요?”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1987)

물론,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 갈라진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시 만나야 합니다. 박재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은 둘로 나뉘진 대립 관계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즉, ‘생산과 소비가 하나’라는 관점에

서 출발해야 합니다.”(「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2003)

한살림운동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대구를 지키며 땅의 생명사상을 실천하고 계시는 천규석 이사장님의 말씀대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는 **생산-소비가 통일된 세상**은 한살림의 이상이자 인류의 이상”이었습니다(「한살림공동체란?」, 1992).

이렇듯 **생-소-하나**는 한살림 협동운동의 절대원칙입니다. ‘하나됨’의 바탕에는 ‘모심’의 생명사상이 깔려있지만, 동시에 한살림 협동운동의 방향과 전략, 조직형태에 대한 탐색과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생-소-하나**의 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이 ‘직거래’이고, 소비자공동체의 조직형태가 ‘생활협동조합’이었던 것입니다.(생산자공동체의 조직형태는 다양합니다.)

직거래를 넘어서1: 삶과 사회를 바꾸는 ‘생-소-하나’

그런데 **생-소-하나**가 곧 직거래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살림을 유기농산물 직거래 업체로 생각하고 한살림의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 회원들도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직거래는 유력한 전략이긴 하지만, 단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흔히 말하는 직거래를 생각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개념이 정확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거래라고 했을 때 그것도 결국은 ‘사고판다’는 개념이 들어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딱 나뉘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체와 인간관계를 바꿔내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직거래가 **생-소-하나**를 실현하는 핵심전략이기는 하지만, 단지 유통단계를 줄여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한살림운동의 종착점은 ‘삶과 사회(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입니다. 한살림에서 생활양식이란 단순히 소비만이 아닙니다. 생산-교환-소비-재생으로 순환하는 경제생활 전체가 넓은 의미의 생활양식입니다.(여기서 ‘재생’은 ‘폐기’의 반대말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폐기로 끝나면서 생태순환이 단절됩니다만, 유기농업의 순환에서 보듯이 ‘재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생-소-하나는 우리의 소비생활을 바꿉니다. 다시 말해 ‘소비양식’을 바꿉니다. 소비를 생산과 무관하게 따로 생각하게 되면, 값싸게 구입해 많이 쓰고 많이 버리는 게

최고가 됩니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생산을 어떻게 하든 무관합니다. 농약을 치고 화학비료를 뿌려 땅을 죽이고, 화석연료를 태워 지구를 뜨겁게 덥혀도 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쓰고 버리는 일회용 생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한살림에서 소비는 땅과 사람과 온 생명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나만 잘 먹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 협동적 소비로 나아갑니다.

생-소-하나는 소비양식뿐 아니라 생산양식도 바꿉니다. 돈 벌기 위한 생산이 아니라,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이 됩니다. 많이 팔기 위해서 생산하려고 하면 농약과 화학비료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유기농업이란 관계를 생각하는 농업입니다. 땅과의 관계, 이웃 농민과의 관계, 소비자와 관계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생명농업, 협동적 농업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소유양식까지도 바꿉니다. 생산자가 함께 소유하는 공동소유 혹은 협동적 소유, 나아가 소비자까지 출자에 참여한 생산자-소비자 공동소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생-소-하나는 도시와 농촌을 이어줍니다. 산업화과정에서 도시는 선망이며 절대선이었습니다. 사람도 자원도 정치도 예술도 모두 도시로 집중되었습니다. 농촌은 그저 도시에 먹을거리와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도시적 삶은 우월하고 농촌의 삶은 열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한살림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와 농사체험을 통해 농촌과 농업을 새로 배웁니다. 도시적 삶과 농촌적 삶, 유목적 삶과 정착적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땅과 분리된 개인의 삶도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생-소-하나**는 인간관계를 바꿉니다. 사고파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 즉 도시에 나간 아이들에게 쌀과 김치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농촌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듯 사고팔기가 아닌 주고받기의 마음과 관계가 녹아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의 공동체, 한살림이 되었습니다.(이는 뒤에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극복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생-소-하나**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소비생활과 생산방법을 바꾸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나아가, 하나로 연결된 생명세계의 마음을 지금 여기서 실현하였습니다.

직거래를 넘어서2: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생-소-하나

"현재 이러한 활동은 농촌과 도시의 직거래운동 차원을 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와 만남, 생산과 소비의 통일을 지향하여 상품사회를 넘어선 새로운 경제질서

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또한 생산자인 농민들은 생명의 농업인 유기농업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주부들이 중심인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을 사먹는데 그치지 않고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우리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죽음의 질서를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최근에 쓰여진 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1990년에 출판된 무크지 『한살림』에 실린 “새로운 삶의 이해와 생활협동운동”이라는 주제의 좌담회 앞머리 글입니다(박재일 회장님과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 이순로 이사장님, 한살림생산자협의회故김영원 회장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참고로 부제는 “생활협동운동, 특히 유기농업과 소비자운동의 연대를 중심으로”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직거래를 넘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거래 자체도 어려운데 자꾸 넘자고 합니다. ‘직거래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자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넘어서,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까요? ‘사고파는 관계’가 아니라면, 새로운 경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김영원 회장님은 좌담에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직거래와 협동조합을 통해 시장경쟁 자체를 넘어서야 한다.” 나아가 한살림 공동체운동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와 대립을 극복하는 제3의 방향으로”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유기농업은 생명문화의 기본』, 1998).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동시적 극복’, 이는 <한살림선언>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한살림운동의 사회적 지향점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직거래는 직거래이되, ‘사고파는 직거래’가 아닌 ‘주고받는 직거래’입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울리는 자본주의식 ‘적대적 교환’이 아니라 ‘호혜적 교환’입니다. 호혜란 서로에게 동시에 이익이 되는 주고받기입니다. 증여와 답례의 관계를 말하며,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선물(gift)경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고파는 관계가 아닌 주고받기의 관계는,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서로 다짐했던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말 안에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 생활은 사고팔 수 없다는 것을.

그 구체적인 방법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약정에 이루어지는 ‘계획생산 책임소비’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의가격’, 혹은 ‘호혜가격’입니다. 한살림 매장에서는 감자가 동이 나도 일반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소비자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일은 없습니다. 약정된 생산량이 소비되지 않으면 이용촉진을 통해 소비를 책임집니다. 2008년 농업용수 문제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아산·당진쌀 8,800가마를 전량 ‘책임소비’했던 한살림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살림의 직거래는 매장에서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매매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의 창조입니다. 시장은 원래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은 인류에게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경제형태 중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시장을 없앤다는 것은 오만이거나 환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의 역사가 그것을 반증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살림의 새로운 경제질서란 시장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가들이 지배하고 또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공산당이 지배자가 되고 이들이 육성한 공기업 등이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시장의 지배자는 다르지만, 그 작동원리는 돈벌이, 즉 이윤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이란 무엇일까요? 이름하여 '호혜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과 영혼마저도 돈벌이의 대상, 즉 상품으로 만들어 사고파는 '상품시장'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호혜시장 말입니다. 시장 본래의 기능, 즉 필요한 것을 주고받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시장이 그것입니다. 한살림매장과 벼룩시장과 로컬푸드장터가 바로 호혜시장입니다. 나아가 교환의 매개가 되는 화폐나 화폐대체물을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지역통화는 호혜시장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라인 중고품장터나 개인 간 금융(p2p lending)도 호혜시장의 예가 됩니다. 35만여 세대의 소비자와 2천여 세대의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여 연간 한국은행권으로 2,500억 원어치의 물품을 주고받는 한살림은 한국에서 가장 큰 호혜시장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호혜시장의 구조를 호혜서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호혜서클, 혹은 호혜시장이 지역과 전국을 아울러 네트워크 하거나, 보다 큰 시장(플랫폼)을 열면 정말 자본주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벌이경제가 아닌 살림살이경제 시스템, 이를테면 '호혜주의 시장경제' 말입니다('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빗대어서).

한살림운동의 목표는 다른 유기농산물판매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살림운동이 진정 열망하는 것은 대안적 시장의 창출과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질적으로 변혁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강물은 깨끗한 물로써만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운동의 선배님들은 소비자공동체와 생산자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꿈꾸었습니다. 한살림 공동체는 국가와 시장, 정치와 경제를 넘어서 '삶/생명(life)' 그 자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운동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시스템은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시스템과 국가가 좌우하는 계획시스템을 동시에 넘어서는 한살림운동의 시스템적 대안인 것입니다.

생-소-하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인공이 되는 하나됨을 위하여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은 일찍이 “한살림 운동이란 모두가 하나 되자는 운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있고 “조합원이 한울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뒤섞여서 각각의 독특한 개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산자는 생산자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존재를 드높이는 데 있습니다. ‘자기소멸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나를 죽여 대의를 받드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하나됨이 아니라, 나를 살려 새로운 세상을 여는 활사개공(活私開公)의 하나됨입니다. 모두가 똑같아지고 또 서로를 꽂꽂 묶어놓은 대동단결(大同團結)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어울리되 똑같지 않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이면서 여럿이면서 동시에 연결된 전체이기도 한살림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참 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자기 주체성을 높여야 합니다. 생협 조합원으로써의 조합원 주체성, 생산자공동체 회원으로써의 회원 주체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생산자 조직 안에서, 소비자는 소비자 조직 안에서 각각의 지역과 개인이 우주의 꽃 한 송이로써 자기를 실현해야 합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나는 미처 몰랐네 네가 나였다”는 말씀은 ‘나 없는 너’가 아니라, “나는 나이면서 동시에 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한살림 협동운동의 미래를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를 잘 계승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을까? 도시의 마을모임과 농촌의 생산자공동체가 진정한 한살림의 기초조직(기초공동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 주체성과 생산자 주체성을 높일 수 있을까? 살아있는 생산자 공동체와 소비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형태가 좋을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물류센터와 매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의 질적인 변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생-소-하나**의 정신과 호혜시장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나아가 ‘호혜적 시장경제(약칭 호혜경제)’로의 체제전환을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끝)

※참고문헌: 여기서 인용된 글의 대부분은 한살림 20년 기념자료집 『햇살과 바람, 그리고 정직한 땀의 기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무크지 『한살림』의 좌담 내용은 『생명운동자료모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살림자료공간>(archive.hansalim.or.kr)에 가면 찾아볼 수 있으며, 출판물은 모심과살림연구소에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뱀발: 그런데 사실 생-소-하나만으로 한살림 협동운동을 설명하기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비밀이란 원래 잘 보이지 않는 법, 한살림의 진짜 비밀은 다른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략'보다 오묘하고 '스토리'보다 심오한, 심금을 움직이는 절절한 그 무엇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렇습니다. '마음'입니다.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웃는 마음,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연결된 모심의 마음. 다시 말해, 한살림 마음.

격월간 정세와동향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8호

책임편집/이슈진단 | 정규호

분야별동향 | 박지은 하만조 김현 하승우

살림의말 | 주요섭

펴낸날 2013년 6월 10일

펴낸이 박맹수

펴낸곳 모심과살림연구소

격월간 정세와 동향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8호